

‘극비’ 당원 명부 유출은 ‘식은 죽 먹기’

“무늬만 극비 문서죠. 누구나 카피하고 주고 받는 동창회 명단이나 다를 바 없죠.”

당헌·당규에 따라 극소수 당직자만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당원 명부가 실제로는 외부 유출이 ‘식은 죽 먹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권리당원을 비롯한 공당의 당원 명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극소수 인사만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쓰도록 돼 있다.

당원 명부 관리권한은 통상 중앙당 조직국장과 조직국 간부, 17개 시·도당 조직국장 시·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제한돼 있다. 시·도당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도 원칙적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 시당 조직국장과 8개 지역위 사무국장이 중앙당 조직국으로부터 권리·일반당원의 명단을 USB로 건네받아 대외비로 관리한다. 시당에는 광주지역 당원 전체 명단이 8개 지역위에는 해당 선거구 관내 당원 명단만 제공된다.

실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21일 최종 명단을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비를 파악해보 난 권리당원, 당비 납부를 약속하고도 내지 않은 약정 당원 등의 명단이 모두 포함됐다.

당원 명부에는 당원 개개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거주지 주소와 같은 민감한 신상정보가 적다 기재돼 있어 비밀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지방선거 입지자들을 크게 늘면서, 당내경선 투표권을 지닌 즉경선유권자인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에서 당원 명부 확보 경쟁도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선거 한 입지자는 “권리당원 모집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대개 3만 원 인파의 당비 우회 대납 논란도 끊이지 않았고 당원 명부만 확보하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어 인맥을 총동원해 명부 확보에 혈안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 중앙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를 각각 반영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권리당원 내 사람 만들기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당원 명부가 실제로는 불과 몇 초 만에 유출

중앙당-시·도당-지역위 조직국장 등 극소수 관리

당헌·당규 유출 금지 서약서까지 쓰지만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휴대용 USB 형태여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을 마음먹을 경우 특정 후보 진영이나 정치권 이해당사자의 PC나 노트북에 당원 명부 USB를 꽂아 다룬다 드하면 명단이 고스란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8개 지역위 USB 중 8분의 1 명단을 서로 교환해 짜집기할 경우 전체 명단이 재생산될 수도 있다.

경쟁 후보 진영에 자기 사람을 심거나 이른바 ‘양다리 당원’이 소위 ‘보함용’으로 명단을 유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USB에 든 명단은 민감정보여서 파일을 열고 출력한 뒤 일반 당원에게 열람할 수는

있지만 복사나 유출은 안된다”면서도 “단, USB 자체를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꽂아 다룬다 경우 속수무책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한 지역위 관계자는 “당원 명부는 총동원회 명단,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전체 직원 명단이나 후원자 명단과 같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출시킬 수 있는 취약할 구조”라고 귀띔했다.

실제, 당원 명부 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A씨 측도 “우리가 그런 게 아닌데 역을 하다”는 반응이어서 명부 유출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개연성도 큰 상황이다.

명단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당법 위반, 이를 토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출 명단을 건네 받은 측은 장물 취득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명부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당원모집과 열과 혼탁 경선, 당원 개인정보에 대한 법의식 결여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권 내에서는 관행으로 보고 별 일 아니다”고 볼 수 있으나 밖에서 볼 때는 명백한 위법행위여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돼야 할 약속”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축축히 내리는 겨울비 겨울 기름속에 반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8일 경남 함양군 수동면 척지마을 양파논에서 정귀용 씨가 양파잎을 손질하고 있다.

‘선거 코앞’ 전남도의원 무더기 외유 논란

신년 초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혈세를 들여 무더기로 해외연수 등을 떠나거나, 예정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13명의 의원은 지난 8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가고시마현으로 연수를 떠났다.

19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연수는 고향세 도입에 따른 선제 대응 등의 명분을 내세웠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역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동경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이다.

1600만원의 혈세가 쓰일 예정이다. 임명규 의장 등 전남도의회 12명도 이날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장시성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의원들의 대규모 외유가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자매결연 교류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지만, 정책개발 명분으로 연수를 떠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임기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연수 목적대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전남도의원 58명 중 24명(41%)이 자천타천으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

할 예정인 가운데 대폭적인 물갈이가 될 상황에서 정책개발을 위한다는 연수는 시기적으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부분 해외연수 역시 외유성으로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더욱 그렇다.

전남도내 곳곳이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상황도 도의원들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은 11건으로 이 가운데 전남에서 8건이 발생했고 이날도 나주에서 시형원이 검출돼 도내 비상이 걸렸다.

김정환 기자

대구서 눈 뚫린 고양이 사체 발견

대구 수성구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누리꾼이 경악하고 있다.

8일 동물보호단체 카라(KARA) 등 따르면 지난 4일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눈이 뚫린 길고양이 사체를 한 주민이 발견해 사진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이 주민이 올린 사진에는 나뭇가지에 눈이 찢려 숨진 흰색 길고양이 사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은 지나치게 잔혹하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누리꾼 최모씨는 “너무 끔찍하고”고 밝혔고, 김모씨는 “죄 없는 동물을 괴롭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동물 학대범에게 강력히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사진과 글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다”며 “착성자와 연관이 닿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으로 신고된 일은 없다”며 “길고양이는 소유권이 애매해 폐쇄회로(CC)TV가 없으면 용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했다.

업주 입원한 틈 타고철 훔쳐 판 40대 입건

거래처인 고물상의 업주가 입원한 틈을 타 고철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진주덕진경찰서는 8일 절도 혐의로 고철 수집업자 노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2시에 완주군 삼례읍 A(53)씨의 고물상에 들어가 146만원 상당의 고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4개월 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A씨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료원 병실에 불 지른 20대 검거

대구의료원 라파엘 웰빙센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지내던 병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22분께 자신이 입원 중이던 대구의료원 라파엘 웰빙센터 6층 한 병실에서 침대에 불을 붙인 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환자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지만 스프링클러와 직원 등에 의해 자체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병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게임중독 등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며 “불이 나면 문이 열린다는 점을 노려ライタ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하던 집서 금품 훔친 가사도우미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8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38·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21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B(53·여)씨의 집에서 안방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20만원을 훔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동안 주 1회 B씨의 집에 출근해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는 B씨가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하는 시간대를 미리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와 금고 위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5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던 중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쳐서 나오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뉴스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비농 농업인 농지매입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구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